

日軍挺身隊동원 확인

1992. 4. 13

세계

관여자료 70건 "강제징발 아직 확인안돼" 발췌

日정부서 수집

韓國등에 자료전달 謝過방침

한편을 논정하는 한편, 5월 중 「중국의 위안부 조사 결과」를 한국등에 관계국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 중공인 위안부를 대상으로 강제징발을 수색하는 △위안부로 일본군이 성병 걸린 부의 출신지가 밝혀진 대를 실시했으며 △대만주만 중국과 필리핀 등 광범위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육한 지역에 걸쳐 있고 △한 군대인이 비밀전보 등을 통해

해인도네시아에 70명의 위안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허가한 기록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일본정부는 이번엔 수집된 자료들을 한국에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국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줄 경우 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挺身隊자료 90건 발견

臺灣人도 피해 확인

또 이번의 자료는 다는 사실이 확인돼, 한국 일본군의 관 이외의 관계諸國과도 새로 「아시아적」외교관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월 11일까지 방위청 69건, 문부성 1건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다. 특히 방위청 발견자료의 대부분은 「일본군인이 위안소를 감독·지휘·출입하고 있었으며, 위안부 모집에도 지방의 헌병 경찰 등의 제후를 투입시켜 관여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挺身隊는 물론 말라

政府 "被害접수 자료"

안정신대 40명() 또는 신종자 50명() 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사례에서 드러난 제의 정신대 동원방법을 보면 중(중)안부의 경우 2명 중 1명(45.6%)로 강제

본군, 정신대에도

폰 등 문서발견

연합] 제2차 대전 당은 강제로 끌려온 종군 받은 돈에 대해 세금 사실이 최근 발견된 문러났다고 야당 정치인 밝혔다. 스미코 참의원 의원(사)서 노구치 미키히코는 발견된 문서 가운데 세합돼 이라며 지난 일 군인 소모에 사(사)에 이었

우 뒤야 아도피